



통일정책토론회

한 반 도 통 일 의 경 제 적 효 과

결 과 보 고 서

2014.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개회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정책토론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축사 유기준 국회의교통일위원장



축사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축사 황부기 통일부 차관



영상축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영상축사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통일정책토론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사회 **목진후** 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토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





통일정책토론회 종료 후 전체 참석자 기념사진



의견을 교환하는 국경복 처장



참석자들과 담소중인 국경복 처장

Contents

Ⅰ 개 회 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3
Ⅰ 격 려 사	정의화	국회의장	7
Ⅰ 축 사	유기준	국회의교통일위원장	11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13
	류길재	통일부 장관	15
Ⅰ 발 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1
Ⅰ 토 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55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1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5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71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	83
Ⅰ 회 의 록			91
Ⅰ 언론보도 모음			133



개회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경복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유기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님,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 류길재 통일부 장관님을 포함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초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도 통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여러 현안 과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한 ‘통일대박론’을 중심으로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통일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을 야기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투입으로 인해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재정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통일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정책토론회는 통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신 예산안 심의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자로 나와 주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님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님,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해 주실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5.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격려사

격려사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서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신 국경북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73%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의 손익을 따졌을 때 우리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통해 얻는 ‘이득’이 통일과정의 ‘비용’보다 얼마나 큰 지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일의 원동력은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발표되겠지만,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큼니다. 경제적 이유만 따져도 통일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내부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며, 우리 한민족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제 오랜 신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을 바탕으로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허브로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경제적 분야에도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5.

국회의장 정 의 화

축 사

축 사 1

안녕하십니까? 부산서구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입니다.

오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경북 처장님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책연구원과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서두르지 말아야한다는 사람이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이중 91%가 통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후 실업 등과 같은 사회혼란 등을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정치학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10년간 연평균 56조5천억 원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투자액의 2.03배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 27조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계량화가 불가능한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으로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한 통일대박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화된 통일 담론을 극복하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통일이 경제적 의미에서도 대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우리는 특히 미래 통일의 주인공이 될 젊은 세대에게 통일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됨을 일깨워줄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 기 준

축 사 2

안녕하십니까,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원혜영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통일 편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10년째 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시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분단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대북 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한
경제성장 등 한반도 경제에 가져올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북 교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5.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원 혜 영

축 사 3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 이후 11년간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국경복 예산정책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과 원혜영 남북관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는 입시나 취업 같은 경쟁에 지쳐 통일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통일의 편익을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인간이 아닌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단절된 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과 불신의 벽 속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통일을 통한 ‘연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모되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기관 역시 통일의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통일의 편익은 영구적이며,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한국정치학회는 통일 이후 10년간 연평균 56조의 생산유발효과와 119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통일 이후 10년간 54조원에 가까운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수치화할 수 없는 많은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할 것입니다.

3.

내외 귀빈 여러분,

당위가 아닌 편익 차원에서 통일을 살펴보아도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통일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통일 준비를 함께 해 나가고자 지난 8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통일준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북한인권법」과 올바른 통일관 등 내적 통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5.

통일부 장관 류길재

발 제

통 일 정 책 토 론 회

발 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014. 11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박 용 주 경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 I. 통일한국의 미래상
- II. 연구개요
- III. 통일의 경제적 효과
- IV. 통일한국 재정 전망
- V. 통일대비 정책 과제

I. 통일한국의 미래상

I. 통일한국의 미래상

4

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한반도 통일



I. 통일한국의 미래상

5

■ 2016~2060년까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비용의 3.1배

통일비용



통일편익



II. 연구 개요

Ⅱ. 연구개요

1 필요성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당위성: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최고의 과제
- 부정적 인식: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 발생
 - 통일비용(최소 500억 ~ 최대 5조 달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 남북한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 등
- 긍정적 인식: 분단갈등 해소, 경제규모 확대, 새로운 투자처와 일자리 등
 - 통일의 경제적 · 비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발생

• 적극적 통일 논의 지원과 국민 역량 결집을 통한 추진력 확보

- 통일은 기회와 위협(재정건전성 훼손 등)이 상존
 -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하는 등 통일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 활성화
 - 정부: 드레스덴 선언(2014. 3) 발표 후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 국회: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2014. 6)

Ⅱ. 연구개요

2 분석의 전제

• 통일시점: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 추계기간: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

- 남한지역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NABO, 2014. 11)
- 중 · 장기 통일한국의 국가채무 등 재정 분석

• 연구범위: 통일한국 경제전망, 통일비용 및 재정 전망과 정책 과제

- 통일한국 경제전망: 성장회계모형(북한지역), 산업연관분석(남한지역 파급효과)
- 통일비용: 항목별 추계(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2014년 남한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지출단가, 대상 적용
 - 재량지출: 남 · 북한 경제 및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
 - 경직성 경비(재량지출): 인건비 등은 수요규모 및 현행 임금 등 적용
- 통일한국 재정: 통일에 따른 순채무부담 및 국가채무 수준 전망

Ⅲ. 통일의 경제적 효과

Ⅲ-1. 통일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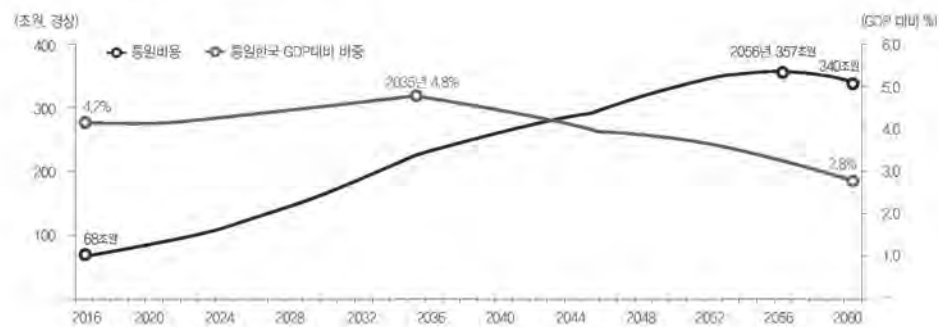
① 추계방법

- 사회보장, 교육, 행정분야 등의 주요 비용항목 추정(항목별 추계방식)
 -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4대 사회보험 등 의무지출 중심
 - 남북한 경제력 격차, 북한지역 성장속도와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
 - 교육·행정: 공무원 및 교사 인건비 등
 - 투자비용: 농업, 도로, 철도, 항만, 자원개발 등 주요 SOC 건설 비용
 - 통일 후 20년(2016~2035년)간 남한지역 GDP대비 1%, 이후 10년(2036~2045년)간 0.1%p씩 감소
 - 기타 재량지출: 항목별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타 비용
 - 남한의 재정부담과 북한지역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남한 GDP대비 1% 수준

Ⅲ-1. 통일비용

2 추계결과

- 2016~2060년까지 연평균 232조원(실질 103조원)으로 GDP대비 3.9%
 - 통일직후인 2016년 68조원에서 2056년 357조원으로 정점에 도달 후 2060년 340조원으로 감소
 - 총 통일비용: 경상가격 기준 1경 428조원(실질가격 4,657조원)
 - 통일한국 GDP대비 비중: 4.2%(2016) → 4.8%(2035) → 2.8%(2060)
 - 2016~2060년 평균: 3.9%



Ⅲ-1. 통일비용

2 추계결과

- 북한지역 사회안정 및 후생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연평균 110.5조원으로 재원소요가 가장 큼
 - 교육 28.1조원, 행정 27.7조원, 투자지출 26.5조원 등

[분야별 통일비용(경상기준)]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단위: 조원, %)	
							연평균 금액	증가율
사회보장	10.8 (15.9)	18.5 (21.1)	59.5 (35.4)	131.0 (49.8)	193.3 (57.8)	154.1 (45.3)	110.5 (47.7)	6.4
교육	13.9 (20.4)	15.0 (17.1)	21.4 (12.8)	29.1 (11.1)	35.1 (10.5)	48.9 (14.4)	28.1 (12.1)	3.0
행정	11.9 (17.5)	13.8 (15.8)	19.9 (11.8)	27.4 (10.4)	37.3 (11.2)	50.4 (14.8)	27.7 (12.0)	3.4
투자	15.7 (23.1)	20.1 (23.0)	33.6 (20.0)	25.2 (9.6)	- (-)	- (-)	26.5 (11.4)	3.5
기타재량지출	15.7 (23.1)	20.1 (23.0)	33.6 (20.0)	50.4 (19.1)	68.8 (20.6)	86.5 (25.5)	104.3 (45.0)	4.0
합계	68.0 (100.0)	87.5 (100.0)	68.0 (100.0)	263.1 (100.0)	334.5 (100.0)	339.9 (100.0)	231.7 (100.0)	3.8

주: 1) 괄호안은 전체 통일비용 대비 비중

2) 제한된 통계자료, 항목별 추계에서 모든 비용항목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통일비용은 추계치와 상이할 수 있음

Ⅲ-2. 통일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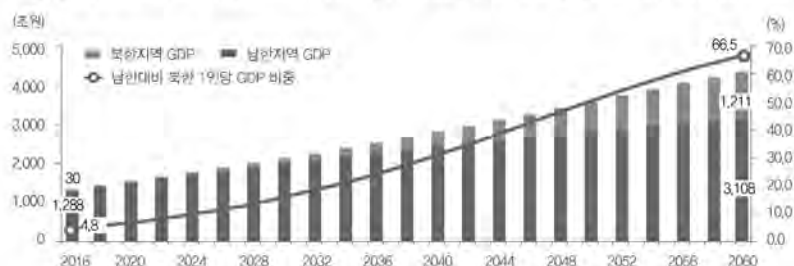
1 전망 방법

- **북한지역 경제전망: 성장회계 모형(Growth Accounting Model)**
 - 전망의 임의성(목표소득방식)과 북한지역을 완전경쟁하 시장경제로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 가정 완화
 - 통일 후 북한지역은 남한 고도성장기와 같이 자본투입 증가가 성장 주도
 - 체제전환국(중국, 동아시아 고도성장국(남한, 대만)의 성장특징: 자본 주도 성장
 - 북한의 인구구조 상 노동의 양적투입 증가는 제한적
(2012년 합계출산율 2.0명, 2033년 고령사회, 2058년 초고령사회 진입)
 - 투자와 생산성에 대한 가정
 - 투자: 통일후 20년간 남한 GDP대비 1%, 이후 10년간 0.1%p씩 축소
 - 생산성: 매년 1%의 추가적 생산성 증가(언어의 통질성, 남한의 개발 지원 등)
- **남한지역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 북한지역 개발과정에서 남한지역에 발생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 **통일한국 GDP = 북한지역 GDP + 남한지역 GDP**
 - 남한지역 GDP = 장기기준선 전망 + 통일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Ⅲ-2. 통일편익

2 통일한국 GDP

- 1,318조원(2016)에서 4,320조원(2060)으로 3.3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2.7%)
 - 북한지역 GDP: 30조원(2016) → 1,211조원(2060), 연평균 9.0% 증가
 - 남한지역 GDP: 1,288조원(2016) → 3,108조원(2060), 연평균 2.1% 증가
 - 남한지역 파급효과: 연평균 19.3조원(GDP대비 1.0%, 0.2~0.8%p 성장률 제고)
- **북한지역 1인당 GDP: 119만원(2016)에서 4,700만원(2060)으로 39.5배 증가**
 - 남한지역 대비 비중: 4.8%(2016) → 66.5%(2060)
 - 남한의 지역간 소득격차(2012년 기준): 전남(1,249만원)은 울산(1,831만원)의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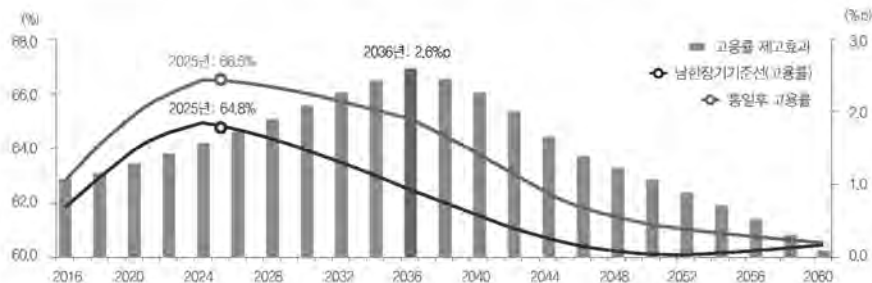


Ⅲ-2. 통일편익

15

3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및 재정지원으로 1,683조원(연평균 37.4조원)의 부가가치 발생
 - 남한 장기기준선(2014~2060) 대비 연평균 1% 증가
 - 2016년 26조원에서 2036년 65조원까지 확대
- 통일후 45년간 2,953만개(연평균 6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남한 장기기준선(2014~2060) 대비 연평균 2.4%의 취업자 증가, 1.5%의 고용률 제고



Ⅲ-2. 통일편익

15

4 통일 편익의 유형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통일 편익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
 - 분단갈등,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 경감과 청년노동력 활용 제고
 - 자원의 생산적 이용과 사회적 갈등 경감은 경제성장률을 0.47%p 제고(통일준비위원회 세미나)
 - 감축된 병력의 경제활동 참여(2013년 기준 병력수 남한 64만명, 북한 119만명)
 - 통일독일 병력: 통일전 54.5만명에서 통일후 24.6만명으로 55% 감축
 - 경제규모 확대, 전쟁 등 국가위험(country risk)해소로 국가신인도 상승
 - 자금조달 비용 저감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 통일초기 비용부담이 재정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물류비용감소,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확대 등으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
 - TKR-TSR연계시 유럽까지 운송기간 20일(해상운송 40일)
 -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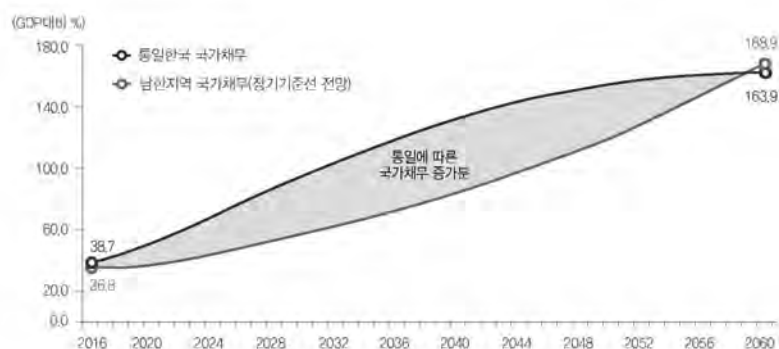
IV. 통일한국 재정전망

IV-1. 통일과 국가채무

18

현 조세부담률 유지시 국가채무

- 통일한국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8.7%에서 2060년 163.9%로 증가
 -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 19.4%가 2060년까지 유지
 - 통일초기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나, 2060년 이후 남한의 장기기준선 전망(168.9%)보다 국가채무 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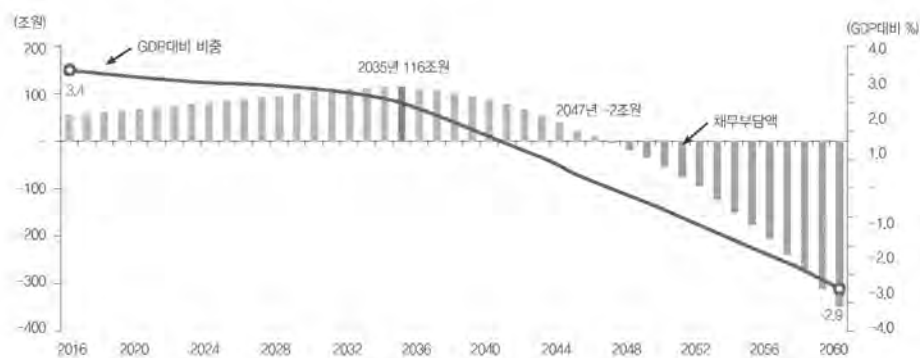


IV-2. 통일의 채무부담

19

통일의 채무부담

- 통일에 따른 추가적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원에서 2035년 116.2조원까지 증가하나 2047년부터 채무 상환 가능
 - GDP대비 채무부담 비중: 3.4%(2016) → -2.9%(2060)
 - 통일의 채무부담 = 통일에 따른 조세수입 - 통일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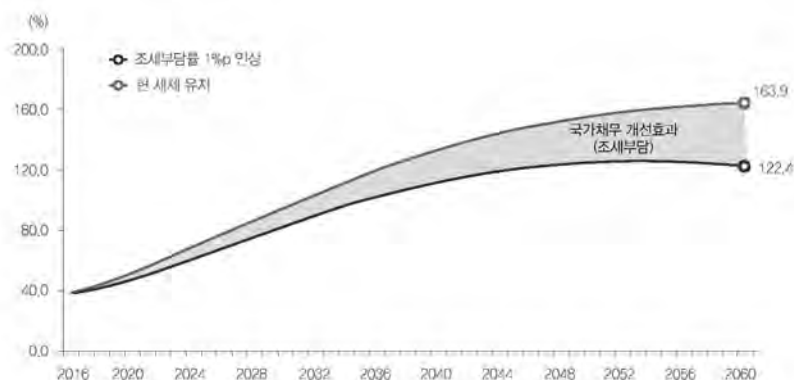


IV-3. 조세부담률 인상과 국가채무

20

조세부담률 1%p 인상

- 조세부담률을 1%p(19.4% → 20.4%) 인상시 2060년 국가채무는 122.4%
 - 통일비용의 일부를 조세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41.5%p 개선
 - 통일한국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과 증세간 최적 정책조합 필요



V. 통일대비 정책과제

V-1. 경제적 편익 극대화

22

1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 소득격차에 따른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전 경제협력 활성화로 북한지역 소득 수준 향상 필요
 - 북한 소득수준은 남한 1인당 GDP의 5% 수준
 - 개성공단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2005~2013년)
 - 누적생산액(2005~2014. 3) 23억 달러
 - 남한지역: 생산유발효과 10.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원, 취업유발효과 43.6만명
 - 북한주민 고용자수: 125개 기업, 52,000명 고용(2014. 4. 기준)
 - *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
- 개성공단 확대, 경제특구(나진·선봉, 신의주 등)개발에 적극 참여
 - 경제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 기술전수, 남한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 제공 등으로 사회·문화적 이질감 완화에도 기여

V-1. 경제적 편익 극대화

23

② 북한지역 노동생산성 제고

- 북한인구의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강화
 - 북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행은 노동공급을 제약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약화
 - 출생률(천명당): 20.5명(1993) → 14.5명(2008), 합계출산율: 2.2명(1993)→2.0명(2008)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안정적 식량 지원
 - 2014년 곡물공급량은 448만톤으로 WTO기준 최소곡물소비량(540만톤)의 83%
 - 정상적 칼로리 섭취량 기준(659만톤) 대비로는 68.0%
 - 모자보건 및 의료 환경 개선
 - 영아사망률: 천명당 26명(남한 4명), 5세미만 영양장애 비율 27.9%, 빈혈: 23.7%
 -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드레스덴 선언): 1,330만 달러 지원 예정

V-1. 경제적 편익 극대화

24

② 북한지역 노동생산성 제고

-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분야 교류 확대
 - 통일 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남한의 산업구조 이행경험, 탈북자 직업훈련 등의 성과를 적극 활용
 - 과학기술분야 교류 활성화: 평양과학기술대학(학부 100명, 대학원 60명, 2010년 10월 개교) 사례 참고
 -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30여명의 교수 및 직원 파견
- 과학기술협력 및 표준화
 - 기술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와 국제화는 생산성 증대로 북한 산업발전 가속화
 - ICT산업을 남북 모두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
 - 남북 과학기술협력 사업(1999): 2010년 5.24조치로 중단
 - 남북한 통계시스템 및 표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 필요
 - 남북 산업표준 통합기반 구축사업: 2001년 시작되어 2006년 중단

V-1. 경제적 편익 극대화

25

③ SOC 투자 효과 극대화 및 재정부담 완화

- SOC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 철저
 - 북한지역 국토종합계획, 기간교통망 계획 등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시행 필요
 - SOC건설은 대규모 자본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투자의 적시성 확보가 중요
- 국내외 민간자본 활용정도에 따라 재정부담 규모 완화 가능
 - 통일초기 SOC투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적극 활용 필요
 - 북한 SOC 민간자본 활용사례: 현대아산(장전항 개발, 980억원), 국양해운(남포항 하역시설 현대화, 21억원), 현통그룹(나진항 하역시설 현대화, 260만 달러) 등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각적인 자원조달 가능성과 규모 검토

V-2. 통일대비 재정과제

26

① 통일한국 재정운용의 목표

- 북한지역 경제 정상화 및 개발 주도
 - 통일한국 재정은 북한지역 사회안정과 통일 초기 경제발전의 촉매 역할
 - 북한지역 사회보장, 도로, 항만, 철도 등 SOC건설을 통한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 지원
 - 북한이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이전 재정건전성 유지는 필수
 - 통일비용 조달 목적의 증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통일한국 재정건전성 확보
 - 통일한국 국가채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통일초기 비용부담과 경제적 편익과의 효율적 시간배분
 - 국채시장 확대를 통한 차환위험 감소 및 유동성 확보
 - 통일비용 부담이 남한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남한지역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V-2. 통일대비 재정과제

27

②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제도 정비

회계/기금 등 재정제도 정비

- 통일재원(증세나 국채발행)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되도록 예산/기금제도 정비
 - 통일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 북한지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편입은 남한지역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
 - 북한 행정구역(1직할시, 2특별시, 9도) 편입시 교부대상 지방정부는 29개
- 북한지역 재정지원은 통일재원으로 조성된 특별회계/기금 등에서 지원
 - 독일사례: 주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에 동독지역을 편입하지 않고 1990년 설치된 독일 통일기금을 신설하여 5년간 별도 운영(1995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편입)

V-2. 통일대비 재정과제

28

②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제도 정비

통일한국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정비

- 시기상 차이는 있으나 통일한국도 인구고령화에서 자유롭지 못함
 - 남한지역은 복지지출 증가가 전체적인 재정운용 부담을 가중
- 통일이전 남한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정비
 - 독일은 연금(1992. 1), 건강보험(1993. 6) 등을 통합함에 있어 동서독간 회계 분리운영,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하한선 설정, 급여수준의 지역간 차이 적용,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인정 등을 적용
- 국민연금 사각지대, 낮은 연금수급률, 연금재정의 불안정 완화와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주요 개선 과제

V-2. 통일대비 재정과제

29

②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제도 정비

- **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 통일후 재산권 관련 분쟁은 SOC 건설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독일 통일후 4년간 구토지소유 재산에 관한 반환소송: 222만건
(미해결 재산에 대한 처리 기간을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
 - SOC투자는 북한지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
 -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반환이나 손실보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 법적 분쟁에 따른 지연은 통일비용을 증가시키고 북한지역 경제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

통 일 정 책 토 론 회

토론 1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1. 비용 편익 논의의 재조명

□ 통일의 비용이 있으면 편익도 있다.

- 그동안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 붕괴에 따른
 - － 비용이 주로 부각되어 왔음.
 - －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
 - － 비용만 제시하면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
- 통일 한국은 남한에도 새로운 기회임.
 - － 8000만명 규모의 통일 한국 경제가 출범.
 - － 분단 비용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대.
 - －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
 - － 새로운 기회에 따른 남한사회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 전문가들의 전망 천차만별

-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통일비용 규모는 30년간 최소 3220억달러(약 373조원), 최대 2조1400억달러(약 2482조원)
 - － 안중범 성균관대 교수는 2030년 통일될 경우 이전 20년간 선비용 79조원에다 통일 후 10년간 최소 734조원에서 최대 2757조원으로 추산
- 원인은 연구의 범위 차이에 기인.
 - － 통일의 시기 및 비용의 지출기간에 따른 차이.
 - － 연구 시기의 차이- 최근 남한의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구 시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복지지출 수준이 달라짐.
 - － 독일의 통일처럼 완전한 사회 경제 통합을 할지, 아니면 부분 통합을 할지 등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됨.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삼대 세습에 따른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논란
- 유엔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등
- 통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2. 통일 비용

□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구분

- 통일한국은 시장경제의 단일체제 가능성 높음.
- 시장경제에서는 민간투자가 정부투자보다 비중 높음.
- 정부는 전력, 교통, 수자원 등 SOC 분야와 산업에 대한 지원만 담당.

□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필요.

- 현재 남한 사회의 사회복지 지출 많아짐. 남한과 복지통합 여부에 따라서 비용 천차만별.
-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20분의 1에 불과해서 북한주민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가능성 높음.
- 4대 보험 외에 기초연금, 보육비, 급식비 등의 문제도.

□ 완전 통합이나 부분 통합이나

- 부분 통합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고, 북한에 대한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함.
- 복지수준을 완전 통합하지 않을 경우, 남북 간 갈등 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해 노동시장 통합하면, 북한 지역 임금 상승 가능성 높음.

□ 통일비용 지출 기간

- 남북한 소득격차는 동서독보다 더 커서 통일비용 지출기간도
- 더 오래 걸릴 것이 일반적 예상.
-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빈약, 정부의 투자성 지출도 상당기간 해야 할 것으로 예상.

3. 통일 편익

□ 비용의 주체와 편익의 주체 상이 가능성?

- 비용은 남한 시민이 부담, 편익은 북한지역 위주 가능성
- 북한지역 대규모 투자, 남한의 성장률은 오히려 저하 가능성

□ 남북한 모두 윈윈 가능성 높음

- 자본투자 수익은 남한에 귀속,
- 북한 투자에 따라서 남한도 생산 및 고용 증가.
- 남한은 생산재, 중간재 수출하고, 북한의 최종재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 북한의 자원은 편익의 원천인가?

-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족하기에 통일 후 객관적인 조사해야함.
- 북한 주민은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시장경제에 낯설어 노동 생산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북한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의 정점과 고령화 시기 추정 필요.

□ 기타

- 규모의 경제에 따른 내수 시장의 확대
- 한반도 통일과 안정에 따른 외국투자의 확대.
- 국방비 절감 등 분단비용 절감.
-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감소에 따른 비경제적 편익의 환산.

4. 결론

-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통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해서 확실한 비용 편익 분석에 어려움.
- 부분통합이나 완전통합이나 하는 문제도 지금보다는
- 통일 당시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
- 그러나 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이며,
-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감소 등에 따른 비경제적 편익도 상당하므로
- 경제적 효과 외의 편익도 검토해야함.

통 일 정 책 토 론 회

토론 2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통일비용 VS 통일편익 논의의 한계

- 통일 관련 비용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편익중심의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 이후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분석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세미나 ‘통일대박 가능하다!':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정종욱 민간부위원장)
-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국가신용등급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매크 맥이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처럼 통일은 매우 큰 불확실성을 그 자체 내포하고 있으므로 통일 비용과 편익의 크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 － 통일비용의 경우 △용도와 지출 주체 △통합의 유형 △비용 지출 기간 등 요인에 따라 천문학적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일편익 또한 △향유주체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등 편익 원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추정엔 한계가 있음(김석진, 통일 비용·편익 논의의 재조명,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3월호)

통일방식		흡수형 통일	무력형 통일	신탁형 통일	합의형 통일
통일경로		북한 붕괴	북한 남침, 한·미 반격	북한 핀란드화 UN 개입	남북관계 선순환
통일 비용	지출기간	43년	53년	25년	29년
	총 비용 (달러)	2조 7,508억	5조 8억	1조 3,209억	2조 4,449억

출처: 문정인, “남북통일의 현안과 전망,” 백범 김구 기념관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2012.10.19.)

□ 통일담론의 방향과 과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통일담론은 정치와 안보가 중심이 된 대결적 성격으로, 통일을 말하면서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 초래
 - － 대화와 협력의 상대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다른 한 주체인 북한이 빠진 독백적 담론인 바,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제도 통일’, ‘흡수통일’용이라며 강력 비판: 북한의 악마화·적대화 초래
 - －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경제협력이라는 인프라 위에 올라서 있는 상부구조의 문제로 경제협력을 제도화 시켜야 안보의 안정이 가능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5.24조치 철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현안 주도라는 정부의 구상은 북한의 진정성과 선 행동을 전제로 하기에 실천의지 없는 화려한 말의 수사(修辭)에 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는 신뢰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는 평화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이니셔티브가 부재
- 현재 전개되는 통일대박론에 근거한 또는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담론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어떠한 통일이 우리에게 대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어떤 통일 과정과 정책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도 보이지 않음
 - － 통일은 정책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국가상을 도출하기 위한 사상적·철학적 성찰도 필요
 - － 하나의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

통 일 정 책 토 론 회

토론 3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통일비용·편익 전망

- 예산정책처의 전망 방법 및 결과는 대체로 합리적이고 타당할 뿐 아니라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점에서 큰 의미
 - 최근의 여러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론으로서, 통일비용은 적정 수준 내로 제한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큰 통일편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 선행연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정책 당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통일 이후 경제통합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결과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
 - 첫째, 북한주민의 남하 이주 규모를 적정 수준 내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즉 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이 제한적, 점진적일 것이라는 가정)
 - 둘째,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가정 (즉 사회보장제도 통합 역시 유예 또는 제한한다는 가정)
- 기본 시나리오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 마련도 필요 (Plan B의 필요성)
 - 통일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
 - 그 경우 통일비용과 편익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보고,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책 연구 필요
- 통일비용과 편익을 남북한 국민별, 세대별, 소득계층별로도 비교해 볼 필요
 - 대부분 연구가 남북한 국민 전체를 아우른 통일비용과 편익 총액만 비교하고 있으나, 개인 관점에서는 각자 사정이 다를 가능성 농후

- 남한 국민의 경우와 북한 국민의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 통일의 순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
 - 통일비용은 주로 남한 국민이 부담하고 통일편익은 북한 국민이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한 국민의 관점에서는 통일비용이 더 클 가능성도 존재
- 통일 순편익의 크기가 세대별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순편익을 세대 간에 평등화하는 정책방안을 연구할 필요
- 통일재원 마련 방법에 따라 소득계층별 통일 순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
 -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증세할 경우, 간접세를 증세하느냐 직접세를 증세하느냐에 따라 소득계층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
 - 통일편익의 크기도 소득계층별로 많이 다를 가능성 존재

2. 통일준비 과제

- 통일 이전에 남북 간 소득격차를 가급적 많이 줄여놓는 것이 바람직
 - 남북 간 소득격차가 작을수록 통일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통일 후 통합과정이 원활
- 남북협력과 북한 개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등 강경 정책이 지속되는 한,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 존재
 - 북한의 인적자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및 개발지원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농업, 환경, 보건의료, 교육 분야 사업은 북한 정권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 정부가 이미 그러한 사업을 실시 및 준비하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통일준비 차원에서 민간부문 협력사업을 더 장려하고 국제협력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대북지원 민간단체 및 그 외 여러 민간 기관의 대북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 장려하고 예외적으로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
 - 대북사업에서는 시행착오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야만 남북 양측 모두 개발역량 축적 가능
 - 북한이 국제기구, 국제 NGO 등 국제사회와 더 많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 전개

□ 통일 이후 경제통합 유형을 결정할 헌정체제에 대한 연구 중요

-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편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에는 경제통합 수준을 제한할 필요
- 그러나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북한주민들이 정치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
- 통일헌법의 내용과 과도적 헌정체제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치학적, 법학적 연구가 매우 중요
- 통일 후 통합방식과 헌정체제에 대해 경제, 재정적 관점의 연구와 정치, 법학적 관점의 연구 사이에서 협업과 토론을 앞으로 크게 활성화할 필요

3. 통일한국의 재정 문제

- 통일 초기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
 - 21세기 금융 세계화 시대에는 일시적인 재정위기도 심각한 금융·경제위기로 증폭될 가능성 존재
 - 통일 전후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헌정체제, 이에 따른 경제통합 방식이 통일비

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통일편익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국제적 인정 필요

- 옛 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붕괴 당시에는 체제전환에 따라 좋은 경제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정권 수립 후 정치적, 정책적 혼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불황 발생
-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통일 이후 남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

□ 통일 전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통일 후에는 국방비 절감 등 재정지출 통제 노력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비용 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이 점이 한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합리화하여 사회보장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통일 전후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정착시켜 국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통 일 정 책 토 론 회

토론 4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1. 통일의 비용과 편익의 개념

- 통일 비용과 편익은 통일방식·속도·시기, 통일비용편익 개념정의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 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주민의 1인당 소득을 한국국민 수준과 균등하게 만드는 재정지출의 규모’로 정의함
 - 최근에는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산업구조조정 등 미래수익을 기대하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광의의 비용으로 해석하면서 분단 및 평화비용과 같은 파생적 개념으로까지 확대됨
 -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이익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편익, 비경제적 편익, 분단비용 절약금, 신규 창출되는 이익으로 분류됨
-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추정목적이나 방법, ▲계량화 수준에 따라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은 통일방식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내수위축, 고용 정체, 자영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

2. 통일비용과 편익의 추정 주요 방법론과 특징

- 통일비용편익의 추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 가능
 - 추정방식 1: 통일에 수반되는 직접비용 항목을 열거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식
 - 장점: 통일의 시나리오별로 비용항목이 적절하게 선정되면 비교적 정확한 통일비용의 추정이 가능

- 단점: 단순 이전지출만 고려하는 경우 투입자금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효과가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 추정방식2: 경제성장 모형, 자본산출계수이용, CGE 등 경제 모형 설정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
 - 장점: 경제 모형을 설정하게 되면 비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고, 파라미터 값에 따라 결과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음
 - 단점: 단순화 된 가정을 사용해야하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투자 이외의 소모적 비용을 포함하기 곤란함

□ 주요 국내기관의 통일비용편익분석 내용

〈표 1〉 통일비용 · 편익분석 연구 비교

연구기관	연구목적	방법론	통일 비용·편익분석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¹⁾ (2010)	통일비용추계	① 북한이 점진적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경우 (2040년까지 30년간) ②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급격하게 붕괴되어 통일되는 경우	① 통일비용: 3,220억 달러(약 373조원) ② 통일비용: 2조1400억 달러(약 2482조원)
통일연구원 (2013)	통일비용 및 편익분석	·통일시점: 2030년 ① 통일비용: 한국 재정지출의 5% ② 통일편익: 한계자본지수의 역추정	① 통일비용(20년): 582조원(실질), 523조원(명목) ② 통일편익: 6천조원(실질), 1경원(명목) *2013년 불변가격 기준
통일부 (2013)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기본승수, 투자승수 모형) ·통일시점: 2030년	- 생산유발효과: 최소 46조원 ~ 최대 57조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소 24조원 ~ 최대 28조원 - 취업유발효과: 최소 500조원 ~ 최대 1200조원 *2005년 불변가격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2010)	통일비용 및 편익분석	·목표소득방법, 한계자본지수,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정	·북한 1인당소득 3,000달러 달성하는데 향후 10년 소요 - 통일비용: 1,570억달러 - 통일편익: 2,200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 (2014)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실증분석모형은 제시되지 않음. ·통일시점: 2050년 ①시나리오1: 남북 단일 경제권 형성 ②시나리오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① 실질GDP: 5.3조 달러 1인당 실질GDP: 7만 달러 ② 실질GDP: 6.9조 달러 · 1인당 실질GDP: 9.2만 달러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아세아문제연구소 ²⁾ (2014)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Cobb-Douglas, Slow 경제성장모형 시나리오: ·분석대상기간: 2015-2050: 35년간 ·2025년 통일 가정 ·2015-2025 10년간 점진적 경제통합	1) 경제통합 편익(2015-2050 35년간) ·총편익: 4,900조원 (3,800조원(남), 1,100조원(북)) ·순편익 최소 163.5-1797.9조원) ·남북한 GDP(1인당GDP) 격차 약 60배(30배) => 17배(8배)수준으로 감소 ·연평균 경제성장률 3.22%(남), 6.19%(북) 2) 경제통합 총비용(2015-2035 20년간): 최소 923조 - 최대 1,627조

주: 1)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한 결론.

출처: KDI "北 갑자기 붕괴 땀 통일비용 7배 더 들어" 한국경제신문(2010.8.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626701>) *원문자료열람불가

□ 한반도 통일의 주변국에 대한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일·중·러 각국의 연구진들에게 한반도 통일로 자국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게 한 보고서에서, 주변국 모두에게 한반도 통일은 큰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추정.

〈표 2〉 미·중·일·러 국가들의 통일비용·편익추정

연구기관	방법론	분석결과
Peterson 연구소 Markus Noland (2014)	·구체적인 통일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①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통일 ·CGE 및 GM 분석 ② 점진적 합의와 협력에 따른 통일 ·World Input-Output table.	① 北美 간 상품교역 최소 9.6억 달러 증가 서비스교역은 3~4.5억 달러 증가 통일 10년 후 상품교역 200억 달러까지 확대 ② 北美간 상품교역은 많아야 5천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
중국북경대 Jin Jingyi (2014)	·구체적인 통일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시나리오 ① 현상태유지 ② 남북군사적충돌 ③ 북한의 개혁개방 ④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② 중국은 최소 8,396.6억 위안(1,36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 야기 ④ 중국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GDP가 최소 1조 위안(1,626억달러) 이상 확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Kyoji Fukao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2015년 통일시점으로 가정 ·시나리오 ① 한반도 평화통일 ② 한반도 평화통일 후 한중경제협력증대	① 일본 GDP는 246억 달러 증가 신규 고용 21만 명 창출 ② 일본 GDP는 86억 달러 증가 신규 고용 7.4만 명 창출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Alexander Zhebin (2014)	- 정치경제학적 분석	· 화해와 협력에 의한 통일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와 통일비용 절감 및 부담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로 연간 50억\$ 이상 수입기대 · 통일한국과의 무역증가 및 극동러시아에 대한 투자증가

출처: KIEP(2014) 9월 17일 국제세미나, 현재 KIEP 보고서로 출판 준비중

- 통일의 비용 추정은 학자와 연구기관마다 다양하며, 최소 500억~최대 5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큼. 이는 통일의 형태, 방법, 시기, 추정 방법 등 학자마다 서로 다른 설정에 기초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

- 통일비용은 대체로 급진적일수록, 통일 초기에, 통합 시점이 늦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급진적 통일의 경우, 갑작스런 통합에 따른 위기관리 및 사회혼란 방지에 대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통합시점이 늦어지면 남북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격차 축소비용이 커지기 때문임.
- 대부분의 통일에 대한 연구는 비용도 따르지만 통일로 인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에게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 대부분의 연구들에 따르면 통일로 인해 남한보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고 통일로 인한 혜택도 북한주민들에게 더 크게 돌아감. 따라서 통일은 북한주민들에게 대박임.

3.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 통일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일은 통일한국 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과 북한지역 투자증대 등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및 수출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 북한지역이 장차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경우, 대외교역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편익이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로 유발되는 정부예산 절감보다는 요소시장 통합, 시장 확대, 지리적 제약 해소 등에 따른 통일한국의 잠재성장률 증대의 편익이 더욱 클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① 생산요소시장 통합의 효과

- 남북한 요소시장 통합에 따라 남한의 이점인 자본·기술과 북한의 이점인 노동력·자원이 성공적으로 결합될 경우 통일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남북 경제통합으로 남북한 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남한 기업들의 대북투자와 생산 그리고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서 남북한경제성장에 기여
 - 북한의 비효율적 산업과 기업들이 통일로 인해 정리되면서 분업과 협업체제가 형성되어 남북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한편,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지역으로의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노동의 분업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시장의 크기는 투자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 특히 요소 부존상태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산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것은 시장의 크기(규모의 경제 효과)
 -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 및 시장과 연계되었을 때 더 넓은 시장, 즉 시장의 확대를 통해 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통일로 북한은 해외로부터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본장비의 수입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일 수 있으며,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기술혁신의 spill over 효과로 총요소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
 - * Coe, Helpman, and Hoffmaister(1996)의 연구에서는 외국 R&D 자본의 유입이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시, Marcus Noland는 이를 북한경우에 적용하여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통일 후 18%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
- 통일에 따라 남한자본 등에 의한 R&D 투자 확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본의 기술수준 개선, 무역개방화를 통한 선진국 기술도입의 원활

화 여건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지역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핵심 결정변수: R&D 투자, 무역개방도, 인적자본 기술수준 등(Barro and Sala-i-Martin, 1992; Mankiw et al., 1992; Bernard and Jones, 1996), 기술선진국과의 생산성 갭(Griffith et al., 2004; Cameron et al., 2005; Acemoglu et al., 2006; Madsen and Timol, 2011) 등
- 남한의 설비운영 프로그램 도입 및 관련 노하우의 공유 등을 통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자본활용 여건 개선 $\Rightarrow$ 북한지역의 평균적 자본 생산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향후 기술혁신의 결과로 생산성이 높은 자본재의 활용기회가 많아지면 낮은 기술의 노동력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높아져 결국 남한의 요소투입구조로 수렴할 것임

② 시장 확대에 의한 효과

- 통일한반도는 인구 7천만 이상의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단, 통합이후 인구 강국의 효과는 북측 주민의 구매력이 확보된 일정기간 경과 후 가시화)
-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수렴가설에 의한 높은 잠재 경제성장율) 및 낮은 고령화 진행율* $\Rightarrow$ 남북한 경제통합시 통일 한반도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시키는 효과 기대
- * 남북한 모두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는 동일하나, 북한의 감소폭은 남한과 비교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경제통합 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완화
- 통일 후 북한내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진행 $\Rightarrow$ 건설 산업 등 경기 활성화 효과 기대
- ※ 국토연구원 · 조선일보(2014. 1. 8)의 공동기획기사에 따르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통일 전후(前後) 10년간 총 122조원 가량 사회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연평균 12조원으로 한국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타 효과

- 지정학적 장점 활용: (1)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에 따른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2) 러시아 가스(혹은 전력) 연결경로 단축 및 비용 축소
- 북한광물자원 활용: 낙후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북한광산의 생산효율성 증대되고, 생산이 확대 ⇒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의 대체효과 기대
- 통일 한반도 형성 및 역내 안보환경 개선에 따라 중국 동북3성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 ⇒ 통일한국과 중국과 경제교류(교역, 투자 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통일에 따른 북한의 핵위협해소 및 북한붕괴 등 지역차원의 안보위협 축소 ⇒ 동아시아 FTA 등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

4.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

□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 모색 필요

- 급진적 통일은 남한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
- 앞서 언급한 통일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도 KDI 추정치를 근거로 비교
 -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30년간 통일 비용을 추정한 것을 보면, 점진적 통일의 경우 약 373조원 (3,220억달러) 소요 추정했고, 급진적 통일의 경우 약 2,482조원 (2조 1,400억달러) 소요 추정함
 - 점진적 통일의 경우 연 13조원이 소요, 이는 2013년 예산 (357조7천억원)의 3.6%인 반면, 급진적 통일의 경우 연 83조원으로 예산의 23%정도 임.
 - 급진적 통일의 경우 통일 초기 재정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평균 남한 예산의 23%를 훨씬 초과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 통일 초기 독일의 경우 동독으로 이전된 지방정부 재정과 사회보장성 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1,250억 마르크중 80%에 달하는 950억 마르크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유입. 특히 급격한 채권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이 투자부문에 유입되지 않고 실업자 및 연금생활자 지원등 소비부문으로 유입, 채권회수 불가능 → 국가 부채 증가
 - 독일은 통일비용 조달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과, 실업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석유세 인상, 보험료 인상등 각종 간접세 인상으로 임금투쟁과 실업자 증대라는 악순환, 재원조달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무시
 - 합리적 재정정책 수립 필요: 독일 연방정부는 초기 긴축 및 예산절감 정책을 시행하였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긴축통화정책 취함. → 금리상승으로 국내 경기 위축
 - 동서독 1:1 화폐 통합은 많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으나 연방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킴. 동독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동독기업의 부채 인수 등은 연방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킴.
- 급진적 통일의 경우 상기 언급한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동반하게 될 것임. 따라서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진적 통일 방안을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94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임.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로 분명히 점진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
 - 통일은 비용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당위적인 문제이며, 통일의 기회가 오면 통일을 해야 함.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는 점진적 통합을 통해 상호 통일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先교류협력, 後통일의 우리정부의 남북연합 정책을 보다 더 정교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통일은 북한주민도 원해야 이루어 질 수 있음.

-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통일은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통일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음.
- 또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그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경제의 자유화, 대외무역 확대, 시장경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거듭난다면 남북한을 넘어 주변 4강과 전 세계로 통일편익이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임.

통 일 정 책 토 론 회

토론 5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



1. 박용주실장 발표(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총 평)

- 한반도 통일을 고려하면서 통일 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예측하고 통일편익과 비용 및 통일한국의 재정에 대한 분석은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며, 국회예정처의 관련분야 전문성을 잘 보여준 매우 심도 있고 수준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함
 - 그리고 추계기간을 2060년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편익 예측을 위해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것은 적절하며 2012년 OECD사무국에서 수행했던 장기전망과 기간(2030/2060년) 및 방법론이 유사하여 예측의 국제적 호환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함
 - 그리고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남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통일비용)

- 통일의 경제적 비용 중 북한의 외채상환이나 남북한 주민의 이동에 드는 비용도 고려하였는지?
 - 추가하여, 사회적 혼란, 이념적 갈등 등의 비경제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것임. 특히 통계자료의 부족 및 불일치성으로 생겨나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부문 비용추계 시 단기적으로 실업상태일 수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어떻게 추산하였는지? 이 때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북한의 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 특수직역의 연금비용에 대한 고려도 하였는지?
 - 북한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도 하였는지?

(통일편익)

- 통일편익 예측을 위해 다른 나라 및 기관의 장기전망을 고려하였는지?
 - OECD장기전망의 경우 2011-2030년과 2030-2060년으로 구분하여 예측을 하였고, 전기보다 후기에 OECD 회원국 및 중국 등 OECD비회원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특히 한국과 중국 등 OECD 비회원국의 경우 후기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1-2060	2011-2030	2030-2060
OECD 회원국	2.0%	2.2%	1.8%
OECD 비회원국	3.9%	5.9%	2.8%
한국	1.6%	2.7%	1.0%

출처 : <http://www.youtube.com/oecden>

- 상기의 측면에서 볼 때 통일 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9%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음. 따라서 OECD 예측 등을 고려하여 경제편익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방법임
- 장기에측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구의 dynamic에 관한 것인데, 북한의 경우 인구에측을 위한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2060년의 통일한국의 인구를 7천만 명이라고 예측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북한의 노령화 등 연령별 인구 예측치도 궁금함
- 그리고 병력 수와 관련하여 우리도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백만 명에 가깝게 증가할 수 있음. 현재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통일 후 증가할 청년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통일한국 재정)

- 단기적으로 급증할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재정운용을 보다 보수적으로 하거나 경제성장률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성 증가
- 통일한국의 국가채무는 통일편익 및 비용추계에 활용한 경제예측 방법 및 조세부담률의 증감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과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정이 필요

2. 통일에 대한 견해

-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단계별(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한 경제적 통일 후 정치적 통일)이라고 생각함
 - 추가하여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의 신뢰확보임
- 북한은 주변국(중국 및 러시아)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 이런 시점에서 우리와 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그 중 가장 큰 편익은 남한이 외딴 섬나라에서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와 다양한 경제협력(저자도 물류 및 에너지 등 다양한 편익 및 추가적인 비경제적 편익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남북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공동체 설립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 입장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수행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추가하여 경제공동체의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그 이유는 효율성은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이 있고, 효과성과 영향력은 공동체가 기대하는 결과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경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정치적인) 통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① Optimal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태(단기/중장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1999년 서유럽 11개국이 Eurozone이라는 단일통화권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까지 1953년에 출범한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부터 40여년간 다양한 형태의 경제공동체가 있었음. 그리고 2014년 현재 18개 EU국가들이 Euro Zone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10개의 EU국가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유럽통합 일지(1953-1999)〉

1953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62 Customs Union
1985 White Book on the achievement of a single market
1991 Treaty of Maastricht
1993 Achievement of a single market
1998 European Monetary (EMU)
1999 Eurozone

- 아울러 현재 활발한 중국과 대만 간 경제적 협력의 경험에 대해 중국의 개방초기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② 다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해 중/러간 등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신의주특구, 황금평/위화도특구, 나진선봉 특구, 시베리아철도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 및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협력은 주로 양자협력의 형태임. 하지만 양자협력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북한의 다자협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다자협력을 통하면 양자협력의 지속성 제고에도 유리하고, 예정처가 제안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자금(특히 ODA) 및 전문성(예 : OECD의 발칸 프로젝트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통일비용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음

③ 북한의 경제/사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경제공동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경제기획원 설립('60년대초) 시 통계국이 4국1과에 포함됨
 -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계자료 불일치로 인해 독일은 현재 1991년 이전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이로 인해 Euro zone 통계자료도 영향을 받고 있음.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통일 후 우리의 경제예측 및 분석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됨
- 추가로 북한 통계자료는 북한이 다자협력의 필수요소인 국제기구 회원국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함

회의록

○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정부는 올해 초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통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현안 과제를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통일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한 통일대박론을 중심으로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 통일 후 비용과 편익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한 세액기반 약화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 통일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을 야기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투입으로 인해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경제가 함께 성장한다면 재정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통일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금일 정책토론회가 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과 원혜영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연훈수**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격려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 **국회의장 정의화** 오늘 세미나 타이틀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근자에 보면, 오늘 아침에 임성호 처장님 오셨네요. 처장님 자체 분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러는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본인은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동의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 갈수록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 3분의 1 정도가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번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한 73%에서 통일은 별로 서두를 것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찬 세미나에서 마침 통일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포럼을 같이했는데 오늘 사회를 보신 장달중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어디 다른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하는데, 저도 그걸 어디에서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의 브로슈어는 북한과의 통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딜레마에 경제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수도 물론 우리가 추계한 데서 연 10조 가까이 덜 걷히는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어느 경제인도 2015년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가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보고 있듯이 여러 가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데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경제와 연관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고도 연관 안 되는 것이 없듯이. 그렇게 본다면 남북통일의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통일에 관해서는 주판을 튕겨서 이것을 하면 얼마가 이익이 되고 얼마 손해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가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길이고 당연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통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이 통일이 된 지가 지금 한 24, 25년 되지요? 그 독일이 맨 처음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시작을 하고 통일될 때까지 시간은 이십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 ‘화해와 협력’ 이런 용어만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러나 통일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는 데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남남갈등 문제, 우리끼리에 있어서도 하나로 통합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남북이 서로 교류를 증대시키고 많은 접촉을 해서 그 접촉면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지금 우리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중국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만 끌어올린다면 경제통합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사회통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 두 방이라고 한다면 각 방 쓸 필요 있느냐, “여보, 우리 예산도 아낄 겸 한 방 씁시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의통일이고 그렇게 갈 때에 지금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젊은이들도 그렇게 합의통일이 되고 나면 본인과 본인의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아무도 경제적인 타산을 따지지 않고 우리 민족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통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물론 전문가로서는 경제적인 계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목진휴 교수님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국회에 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국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자주 오서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 주시면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회 연훈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기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님의 축하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목진휴 교수님 또 기꺼이 토론에 응해 주신 존경하는 홍일

표 의원님, 최재천 의원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차관으로 승진하신 통일부 황부기 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인데 통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보다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런 주제로 아마 오늘 논의가 집약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통일을 하게 되면 부담만 많이 늘고 우리가 세금만 더 많이 내고 우리 일자리는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투자하는 SOC의 투자액보다는 2배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또 부가가치도 대략 한 28조 정도가 부가가치, 예를 들면 물류를 빨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지에 상품을 수송할 수 있고 또 물건에 대한 보관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한 가치 유발효과도 생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한 120만 개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통일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마니까 또 한편으로 얻어지는 편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나중에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추산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대략 우리 GDP의 한 4% 정도, 올해 우리 GDP가 한 1200조쯤 달하면 한 50조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GDP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 150조, 200조까지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러나 그 부담은 20년~30년 정도면 아마 끝날 겁니다. 독일도 통일된 이후에 15년 동안 동독의 SOC에 우리 GDP의 1.5배에 달하는 1750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나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영구하고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담은 일시적이고 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얻어지는 편익은 무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축복스러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통일을 향한 힘찬 밑거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연훈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장님의 축하말씀이 있겠습니다.

○ 국회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장 원혜영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이렇게 뜻있는 행사를 주최해 주신 국경북 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예산정책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구호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울수록 통일이 갖는 의미, 효과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고 국민이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개성공단이 10년째 가동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통일이고 그것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통일되면 분단 유지비용이 상쇄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최대한 투입됨으로써 생기는 효과 또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얻어지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통일이 하나의 민족적 가치를 넘어서는 우리 생활상에 아주 의미 있는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와 토론이 좀 더 심도 있게 또 실질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통일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회 연훈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류길재 통일부장관님의 축하말씀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당초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기로 하셨는데요. 일정 관계상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대신해 황부기 통일부차관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 통일부차관 황부기 안녕하세요?

통일부차관을 맡은 황부기입니다.

앞에서 의장님 그리고 두 분 위원장님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탬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장관님 축사를 대독하는 임무를 띠고 나왔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차관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크게 기여해 온 예산정책처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국경북 예산정책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유길준 위원장님, 원혜영 위원장님, 박형준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는 입시나 취업경쟁에 지쳐 통일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통일의 편익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인간이 아닌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단절된 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과 불신의 벽 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남북 관계 정상화와 통일을 통한 연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모되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기관 역시 통일의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통일의 편익은 영구적이며 비용보다 편익

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에 한국정치학회는 통일 이후 10년간 연평균 56조의 생산 유발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수치화할 수 없는 많은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당위가 아닌 편익 차원에서 통일을 살펴봐도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통일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통일 준비를 함께 해 나가고자 지난 8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국회도 통일 준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연훈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무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중론을 모아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초청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서독의 베를린장벽이 역사에서 사라졌듯이 남북 간의 분단장벽도 사라지는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 나갈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목표하에서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통일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간 협의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통일경제교실’이라는 연구모임에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최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 국회 차원의 논의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존 비용편익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에 따른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이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이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통일정책토론회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추상적 구호나 거창한 구상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이 대담하게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많은 혼란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게 독일의 교훈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연훈수** 이외에도 시간관계상 언급드리지 못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목진휴 국민대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목진휴** 통일에 대한 통일의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님 환영하겠습니다.

○ **발제자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고 그동안 저희 팀과 같이 연구를 했던 박용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연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통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13년보다도 2060년도에 가면 일인당 GDP라든지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10위, 7위, 12위에 해당하는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한 3.1배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서 통일의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오히려 통일의 당위성 그다음에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에서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감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재정에서 이 통일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는데 일단 일을 하다 보니까 통일비용 추정이 상당히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통일비용을 재추정해 보고 또 이로 인한 GDP 성장을 계산을 해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좀 확보를 해 보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감내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일단 초기에 해 보니까 통일비용을 일단은 감내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인 통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국민들의 통일역량을 집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석의 전제는 통일 시점을 2015년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봤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통일 시점을 다른 기관들처럼 30년 이후라든지 아니면 15

년 이후라든지 또 점진적인 통일을 보지 않고 왜 내년도에 즉각적인 통일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경제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남한 경제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이론적으로는 참 좋고 또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통일은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독일 예를 잠깐 들면 독일도 1989년도, 불과 2주 전인 11월 9일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25주년 되는데 그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날 불과 며칠 후에 콜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무너졌어도 통일은 한 5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협약을 맺은 것이 7월 달이니까 불과 반년 만에 통일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점진적으로 갈 것이냐, 빨리 갈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지만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은 갑자기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가정이었고, 또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점진적 통일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추정한 것이 상당히 많은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비용을 저희가 추계하는 방법은 일단 모든 항목에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비용을 추계하고 사회보장 분야, 교육 분야 그다음에 행정 분야 등 각종 비용항목을 전부다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해 가지고서 봤고요.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4대 사회보험 등의 무지출을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공무원 및 교사 인건비 같은 것들 다 봤고요. 저희가 한 것은 모든 통일비용의 항목별 추계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SOC에 있어 가지고는 통일 후에 향후 20년 동안 남한지역의 GDP 대비 1% 정도를 통일비용으로, SOC 건설비용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런데 그 후 10년간은 0.1%씩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량지출은 항목별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비용인데 이것은 남한의 재정 부담과 북한지역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가지고서 남한 GDP의 1% 수준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통일비용이라는 것이 한 10년 지나면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한 15년, 10년 지난 다음부터는 통일비용을 추산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통일 후 10년이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 균등발전 차원에서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통일비용을 보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2060년도까지 연평균 한 232조 원, GDP 대비 한 3.9% 정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GDP 4% 정도의 통일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요. 통일한국 총 GDP 대비는 16년도에 4.2%에서 쭉 늘어나다가 2035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떨어지는, 2060년도 가면 2.8%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년까지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한 달 전에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기준선 전망을 뭐냐 하면 남한 재정이 60년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본 것이 기준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남한 재정만을 봤던 것하고 통일 후 부담이 남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똑같은 시점을 두고서 60년까지를 전망을 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에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표를 보시면 사회보장 분야가 연평균 한 1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교육 그다음에 행정, 투자, 지출 순으로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가 절반 정도를,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일편익을 보시면 편익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통일로 인해서 북한지역이 성장하는 GDP 성장 그다음에 통일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남한지역으로 북한지역에서 넘어오는 파급효과, 그 2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GDP는 북한지역의 GDP 그다음에 남한지역의 GDP 그 2개를 플러스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통일한국의 GDP는 2016년도에 1300조에서 2060년도에는 4000조 정도로 늘어나서 3.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2.7%입니다. 북한지역이 연평균 한 9% 정도 증가하고요. 남한지역이 연평균 한 2.1% 정도 증가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것보다는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안 하고 성장을 한 것보다 한 0.2~0.8%p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 GDP도 보시면 북한지역 일인당 GDP가 2016년도에는 119만 원에서 2060년도에는 한 47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한지역 GDP 대비 비중이

통일 시점에는 한 5% 정도 했던 것이 2060년도에 가면 한 6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는 기준은 남한지역 간, 지금 현재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남과 울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 68% 차이가 나는데 66% 정도면 거의 남한의 지역 불균형 정도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한지역 파급효과를 보시면 북한지역에 대해 우리가 투자와 재정지원으로 해서 연평균 한 37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남한 장기기준선 대비는 연평균 한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일 후 한 45년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 선이 통일 후 고용률입니다. 파란 선이 남한의 장기기준선, 통일 안 했을 경우에 남한에 있어 가지고 고용률 전망이고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일편익은 결과적으로는 편익이 전부 다 GDP로 나타나겠지만 부문별로 보시면 각 부분에서 군사적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단갈등, 사회적 갈등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청년 노동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통일편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비용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갈등비용 경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달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 세미나에 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감이 경제성장률의 한 0.4%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가위험이 통일이 될 경우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류비용 감소라든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확대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편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의 편익은 적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저런 리스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분단은 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고 전쟁을 겪은 나라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다음에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유럽의 중앙에 있어 가지고

뻔어 나갈 데가 많습니다. 물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통일되었을 때 느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큼니다. 그래서 독일은 사실 국민들이 통일돼 가지고 부담만 느꼈지 편익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독일보다는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전망을 보면 한국 통일로 인해 가지고서 생기는 통일비용을 국가채무로 부담할 경우에, 조세는 현재하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 조세를 안 하고 국가채무로만 부담했을 경우에는 표에 보시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이 우리나라가 통일 안 했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기준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고요. 위에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통일 초기에는 국가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60년을 전후해 가지고 국가채무가 통일을 안 했을 때 남한의 국가채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국가채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항상 국가채무로 말씀드립니다. 조세부담 안 줬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세부담을 늘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할 경우에는 그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할 것으로 나타나고요. 조세부담률을 1%p 올렸을 경우에는 국가채무는 122%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릴 경우에는 더 개선될 수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되자마자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14%에서 15% 또 16%로 이렇게 올려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한 10%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p만 올려도 한 6조 정도의 추가 세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일비용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통일되었고 그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통일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소득격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일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 지역의 국민들 간의 이질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라도,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이질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예입니다. 독일에서 그동안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하면서 했을 때도 개성공단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도 분단 후 40년 만에 통일되었습니다. 보통 독일 사람들 하면 근면하고 그런 사람으로 연상되어 있었는데 통일을 해 보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서독과 동독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동독 사람들이 그동안에 게르만 민족의 전통적인 근면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사회주의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독일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통독 이후에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70년입니다.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해고 70년 된 분단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질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북한의 고령화가 똑같이 우리나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량 문제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고령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이라든지 의료환경 개선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업훈련도 사전에 가능하다면 많이 할 수 있고 최근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그것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학기술 협력 및 표준화가 통일된 직후에 바로 우리나라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북한 통일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표준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OC투자입니다.

SOC투자가 앞으로 북한지역 개발에 필요한데 SOC는 바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전에 상당히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또 지적 관련돼 가지고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동구권에서 사회주의를 버리고서는 개방주의로 들어왔는데도 보시면 바로바로 투자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적이 없었습니다. 지적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부터 준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SOC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민간자본을 활용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담보다는 좀 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SOC를 민자사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지역에 조금 돈이 되는 지역들은 SOC를 민자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재정목표는 우리는 북한지역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개발 주도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통일 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모두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재정제도가 지금 회계가 18개 회계가 있고 기금이 60개 넘게 있고, 상당히 복잡한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시켜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회계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북한지역에 들어갈 재원들을 한 회계에 집어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독일 통일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교부금제도지요. 어차피 총수입의 한 40% 정도를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독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동독하고 서독하고 똑같이 나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통일기금입니다. 통일기금을 통해 가지고서 교부금제도를 운용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냥 통일이 될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북한에 있는 직할시라든지 특별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스템이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비용 중에서 사회보장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델 가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북측 지역에 포함시켰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가 낭비가 없고 그렇다면 그게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과연 낭비요인이 없는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비효율성을 미리 통일 이전에 제거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지 통일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점점이 필요하다…… 통일 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반환소송이 동독지역의 건설을 상당히 막았습니다. SOC 투자를 막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SOC 건설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북측 지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2018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3년 후까지도 소송이 계속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국유재산 관리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스킵하고 지나가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주제 그리고 많은 양의 발표문을 20분 만에 딱 마감을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과 관련된 점도 지적해서 토론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시간은 한 시간쯤 토론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인데요. 이걸 또 일인당 쪼개 보니까 형편없이 작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에 ‘한 분당 3분 이상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써 놔는데, 최재천 의원님 열심히 적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큰일 났네.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평이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 논평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세 꼭지의 토론이 있는데요.

어떻게, 세 꼭지가 다 같지 못 같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꼭지는 시키는 대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첫 꼭지가 총괄적 논평인데요.

순서는 홍 의원님, 최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3분 해 주시면 다음이 3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토론자 홍일표** 오늘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또는 정부 일각에서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그런 것을 계산해 냈다 저는 이런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주로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둔 얘기로 이렇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의 대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도 오늘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편익이 비용 대비 3배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3배 이상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결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것을 분석하는 여러 틀이, 기준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우선 2015년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통일비용을 그때부터 계산해서 최대 50년간 계산을 해 보자 이런 점에서, 비용의 총량 면에서는 최대치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30년 통일을 가정해서 10년간 했을 때 2700여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천 몇백여조 원의 비용이다 이런 결론이 최대치에 접근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바는 있지만, 우리가 동서독 통일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독일도 1990년에 통일이 된 이후로

2003년까지 한 12~13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성장률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러다가 독일에서 떠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독일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개혁이라는 것을 하면서 새로운 독일을 탄생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많은 굴곡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처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비용이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도 효과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많다 이런 점을 저는 소중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거부감을 적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통일 준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 발표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최재천 위원님 한 4분 쓰셔도 되겠습니다. 4분쯤 썼습니다, 홍 의원님이. 4분쯤 쓰십시오.

○ 토론자 최재천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부탁드립니다.

○ 토론자 최재천 먼저 예정처가 통일정책토론회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채무 부담 문제 등 통일한국 재정전망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논의의 다양성을 위해서 조금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이 1차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막대한 가치인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랬어요.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도 이 발언을 굳이 몇 차례 읽어가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효과분석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갖는 복합적 의미를 생각할 때 역사나 문화나 민족이나 정통성이나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상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분석적 틀이 있을 텐데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사상시켜 버리고 경제적 효과분석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는 그런 식의 정치적 행태들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미 FTA나 국제회의 효과분석이나 국제경기 효과분석이나 이런 데서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분석이 모든 논의를 압도해 버리는 이런 누가 통일 논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게 도리어 한편으로는 이런 토론이나 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되겠지요. 변수를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의의 균형이나 긴장감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일수록.

왜냐하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상호 비방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라만 안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빠라 보내지 마. 우리 대통령 비난하지 마’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체제가 대단히 허약한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통일 논의를 과도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호 비방중지라는 넓은 틀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취약한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더 긴장감 있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분석 논의와 함께 교류, 협력, 신뢰 구축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완화, 이런 여러 논의들이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함께 갔을 때 이런 분석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 변수들을 대입시켜 나갈 때 경제적 효과분석이 정밀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를테면, 제가 법학을 해서…… 범죄분석을 할 때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은요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과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득이 더 크면 내가 안 잡힐 가능성 있다 그다음에 내가 잡히면 10년, 삼진아웃되어 가지고 10년

20년 산다 그러면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이득이 많고 도망 갈 자신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이나 범죄학의 접근법이 한국사회에 지나치게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논의도 단순합니다. 통일비용 대 통일편익을 비교해 놓고 통일편익이 크면 이걸 좋은 거야,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 버리는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인간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바탕을 둥니다만 그런 인간관이나 철학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나갈 때 자칫 사회적 영향평거나 또 다른 변수들을 놓쳐 버리게 될 위험성, 그런 것들이 이런 효과분석에서 자칫 사상될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보다도 더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홍은표 교수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자 홍은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통일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 통일 편익과 비용 및 통일한국의 재정에 대해 박용주 실장님의 분석은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잘 보여 준 매우 심도 있게 수준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계기간을 2060년으로 확대하고 편익예측을 위해서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것은 적절하며 2012년에 OECD 사무국에서 수행했던 장기전망과 기간 및 방법론이 유사해서 예측의 국제적 호환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서 남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은 북한의 외채상환이나 남북한 주민 이동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회적 혼란, 이념적 갈등 등 비경제적 비용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자료의 부족 및 불일치성으로 생겨나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부문 비용추계 시에 단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어떻게 추산하셨는지, 그리고 이때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시는지,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 특수직역의 연금비용에 대한 고려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셨는지, 이것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통일편의 예측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및 기관의 장기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ECD의 경우에 향후 30년과 20년보다 30년에서 60년간 세계 경제전망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가 9% 정도 성장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에측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다이내믹에 관한 것인가 북한의 경우 인구예측을 위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궁금함을 토론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건 시간 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형권 부위원장님께서 받으셔야 되겠는데 홍 교수님이 진짜 3분도 안 썼습니다.

○ 토론자 정형권 예,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에 초청을 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박용주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많은 통일 관련 연구들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비용보다는 장기적으로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박용주 실장님의 오늘 발표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유사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홍 교수님께서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항목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비용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소득효과라든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반면에 또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CGE모형이라든가 투입산출계수라든가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정책변수들을 바꾸어 가면서 그 결과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을 뽑아낼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현상들을 다 100%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용주 실장님께서 분석을 하신 이 부분들은 2개를 다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정을 추정하는 재정추정치모형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통일과 편익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는 가장 뭐랄까요, 러버스트(robust)한 그런 모델을 갖고서 추정을 했더라는 것하고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도 박용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동서독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지나서는 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로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45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통일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급진적인 통일을 얘기하시는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시나리오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유기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통일 편익·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무엇일까를 도출하는 데 사실 그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정을 분석하신 이런 틀에서 어떤 통일방식이 효율적인, 말하자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은 대박이고 동북아 주변 국가에도 대박이고 했습니다만 박용주 실장님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통일은 역시 북한 주민에게 대박입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북한 일인당 GDP가 11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60년에는 4700만 원, 약 4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대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일이 남한 주민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의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북한 대박론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첫 번째 토론 총괄적 논평에 관해서 김석진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토론자 김석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정책처 연구를 받아보고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같은 주제연구에 참여를 해 봤고요, 이제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나온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읽어 봤는데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나온 연구들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연구는 그동안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채워준, 정책 당국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훌륭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 제일 잘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통일 비용편익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고 연구가 끝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나온 연구도 그렇고 예산정책처 이번 연구도 그렇고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기본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본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살고 싶어 할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사람들한테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연구에서

도 적용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했지만 제도는 적용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준은 북한의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남한과 똑같이 주지 않고 남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줘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기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이런 기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100%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한으로 내려옴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에 상당히 큰 혼란이 조성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복지제도도 원래 우리가 이 연구에서 상정한 것보다 북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한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제도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되고 남북한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얘기할 때는 남북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남한 국민이나 북한 국민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세대별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소득계층별로도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 본다면 남북한 국민별로, 세대별로, 소득계층별로 통일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통일 이후에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 지역, 계층, 집단에게 비용이 집중된다든지 편익이 집중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보니까 여러 토론하신 분들 말씀이 전제, 방법론 그리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박 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자 박용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시점을 2015년으로 한 이유는 통일이 2015년에 가능하다 그 말씀은 아니
고요. 다만 이번 시점에서 통일이 되었을 경우, 특히나 남한의 모든 제도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파급효과를 미쳤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것은 어떤 실
행 가능한 대안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정도 통일비용이
나올 것이고 어떠한 혜택이 나올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점을 늦추지 않은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시점을 늦추
면 늦출수록 사전에 가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일시점 되기 전에 2025년까지 뭐할
것이나, 여기에 대한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가용한 데이터 가지
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을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재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감안 못 한 것
은 저희가 모형이 경제학적 모형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래서 저희
도 이런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들
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뒤에 드렸고 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라든지 경제적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
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사전에 많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코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에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내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홍은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구예측은 통계청하고 한국은행 것을 받아 쓴 것이
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인 큰 문제인데 국민연금도
사실상은 국가재정,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재정하고는 이게 기준선에 빠져 있습니
다. 정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남한도
20년이 되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북한지역도 20년 가입기간을 둔 것이고요. 그다
음에 그 대신에 북한지역의 저소득층들한테는, 노인들한테는 기초연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한테 기초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계산한 것입니
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정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45년도로 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장기전망을 합니다. 장기전망을 하는데 그 장기전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기전망하에서 통일 이후 어떻게 변하는가 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일방안은 당연히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통일이 당연히 코스트를 낮춰 줍니다. 통일비용을 낮춰 주지만, 저희가 이 보고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본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갑자기 통일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소득계층별, 세대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비용분담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국가 분단의 해결책은 비용분담이다 이랬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남북 간에 그다음에 지역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세대 간에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이다, 가장 큰 열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조세 부담이라든지, 조세 부담이라는 것이 계층별도 있지만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세대 간의 분담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박 실장 설명처럼 한 3배 정도 이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통일이 필요성 측면이나 아니면 당위성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걸림돌이 있을까 하는 이런 점을 한번 짚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상 계획은 두 쪽지를 나누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냥 묶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홍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최재천 의원님께서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토론자 최재천 며칠 전에 핀란드 총리께서 한국을 다녀가셨는데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 평화구상의 모델이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5년에 과정으로서의 동서화해모델이 헬싱키 프로세스인데 연성 이슈에서 경성이슈로 가자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네 모델에서 해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 우리는 북한 문제보다도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인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지나치게 군사적이고 안보적이고 이런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일본을 좁은 의미의 악마화를 하는 것처럼, 악마라는 단어는 그냥 술어일 뿐입니다. 정치적 술어일 뿐인데, 자칫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되려 연성이슈를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감소시켜 나가고 통일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의 단계적이고 과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지요. 북한도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프레임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투사하고 있고 우리도 국내 정치적인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철저히 굴복시키는 방식의 폭력적 성격의 다수결주의를 그대로 상대방에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요 홍은표 교수님께서 마침 건강변수라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메모를 하다가 그걸 좀 적어왔습니다. 쪽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동서독 기대수명 차이가 3년이었는데 그걸 극복하는데 17년 걸렸답니다. 동서독을 맞추는데……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남 북한은 12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4를 곱하면 68년 차이 납니다. 키는 지금 20cm 차이 나고, 그렇지요? 몸무게는 한 30kg 차이 나고. 그건 별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오드결핍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어린 아이들 한 1000만 명 정도가, 북한 한 2500만 명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요오드결핍증인데, 이건 천일염이나 다시마나 미역 여기에서 먹을 수 있어요. 1년에 미역국 두세 번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비타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역, 다시마, 김, 천일염 남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져갈 수

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갑상성 기능저하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부종으로 이어
져요. 키가 안 커요. 이게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지능지수가 80~90으로 떨어집니
다. 이것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동서독 사이에도 동독 놈, 서독 놈 해 가지고 동독 놈들을 2류 시민 취급을 했
잖아요. 저희들 탈북자들 2만 7000명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80%가 외국
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자기 나라로 가거나 중국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 정도 관
리할 능력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IQ 80~90짜리들, 우리가 그 사람들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데 우리가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요요드 지원하자, 소금 지
원하자 그러면 군용으로 전용된다고 착각을 해요. 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소
금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시다만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단계적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구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성이슈에서 경성이슈로 가고 남북 화해·협력을 좀 더
다각도로 증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했던 모자보건사업이나 이
런 여러 가지들..... 최소한의 생필품, 이를테면 소금이나 설탕조차, 아이들 탈지분
유조차,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공급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통일 이후, 통일 전후로 분담비용이나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사례로 들
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홍 의원님 받아 주시지요.

○ 토론자 **홍일표** 최 의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
리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이고 그런 말씀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나 지금 드레스덴 선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정말 통일
을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아주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이 결국 남한 정부의 경직된 태도 때문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도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사실 저는 경제를 떠나서 북핵 문제 접근에 관해서도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북핵이 제거되어야만 다른 것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핵 자체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회담이든지 뭐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은 경제적인 효과가 어떠냐 이런 것을 놓고 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비용 편익분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경제라는 것이 비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아까 정 부원장님께서 “북한 주민에게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독일에 가서 동독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보면 “통일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직업을 잃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이 딱 되니까 좋은 직업들은 다 서독 사람들이 와서 하고 동독 사람들은 교수하던 사람도 실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이후에 직업을 다시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직업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충고를 우리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이 항상 행복한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그런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단계적인 접근은 중요하다..... 사실 독일 통일 전의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을 비교하면 우리하고 북한은 정말 비교가 안 되지요. 수백 배 차이, 통신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TV 시청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김석진 위원께서는 재정 쪽으로도 뒤에 보니까 토론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급 주시면 좋겠습니다.

○ 토론자 김석진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북한의 인적자본을 해방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나쁜 체제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 이후에 그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북한의 인적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에서 이미 그 방향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간 부문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풀어 주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민간 부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별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더 장려하고 예외적으로만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간 부문의 협력사업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민간 부문에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만 통일 이후에도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경제통합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노동시장 통합을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또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에 적용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헌법적인 문제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에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러한 통제가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일한국에서는 어떤 식의 헌정체제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들끼리, 법학자들은 법학자들끼리,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들끼리

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대로 협업과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한국의 헌정체제와 경제통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유로존의 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시적인 재정위기라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일반적인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경제·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정체제의 문제까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정체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 주어야만 통일한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경제성장 전망 같은 게 잘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정형곤 부원장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 **토론자 정형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이슈 하나하고 재정 이슈인데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급진적인 통일은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쇼크를 동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교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94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민족화해단계를 통해서 남북연합 그리고 정치적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단계적 통일에 따르는 경제통합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역시 선교류 그리고 후 통합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일부를 사실은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가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특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제2의 중국과 같이 변화를 한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진적인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정책적 실수를 미니멈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또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통일로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을 많이 빚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을 많이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니멈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박용주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북한의 상황 으로서는 의미 있는 경협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설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전제되는 그런 남북경협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실제로 어떤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30년을 가정했을 때 점진적인 통일은 약 13조 원, 연평균 13조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013년 예산이 357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급진적인 통합을 가정했을 때는 연 83조 원, 약 23%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서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통일비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조달하는 부분이 채권발행인데요. 전체 채권발행액의 80%가 90년에서 94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재정적인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에 전체 예산의 23%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수요는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런 재정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폐통합이 급진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내지는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의 부채 처리 문제라든가 북한의 부채를 우리가 또 안고 가는 문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재정건전성 효율화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효율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홍 교수님.

○ 토론자 홍은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적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우리가 통일 편익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북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와 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 편익은 남한이 북쪽이 막힌 외딴 섬나라에서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경제협력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공동체 설립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아니고 북한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경제공동체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적절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장단기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1953년도 이후 진행된 유럽통합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자란 북한이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자협력을 통하면 양자협력의 지속성 제고에도 유리하고 예정처가 제안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자금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통일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호환성 높고 정확한 정보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OECD 사무국에 지난 16년 근무했고 또 지난 30여 년간 외국에 있었던 경험으로 미래는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목진휴** 여기까지 박 실장님 혹시 다섯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개 말씀 주시고요.

지금 질문이 어디에서 들어왔는데 갖고 계시나요?

○ **발표자 박용주** 예,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 **사회 목진휴**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먼저 읽어 드릴 게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시지요.

○ **발표자 박용주** 예.

○ **사회 목진휴** ‘232조 비용소요 계산은 착오인 것 같다.’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일 방식으로서 국경을 여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는 닫아 놓는 것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두 번째 것은 박 실장께서 포함해서 말씀 주시고 세 번째 질문, 국경을 여느냐 닫느냐는 이런 것은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 **발표자 박용주** 숫자는 저희가 3.9%라는 것은 연평균이고 그다음에 GDP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GDP가 정상가격이 아니라 쪽 증가하기 때문에 누적하면 가

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GDP 3.9%면 다른 비용추계랑 거의 비슷하게, 4% 정도, 5% 정도 되는데 거의 다른 데랑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20년 지나면 사실상은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부분이 지역 내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서지역 불균형 문제처럼 남북지역 불균형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이라고 딱 클리어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남북 간의 이동 문제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도 이걸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지만, 저희는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그 대안으로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관련해 가지고 토지에 나중에 우선권을 준다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일 이후에 급격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독일 같은 경우도 초반에 서독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논문이 상당히 가정을 전제로 했던 연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정치·사회적·군사적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모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봤던 것이 결과적으로 최재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만 볼 것은 아니고 나머지 학제적 통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 저희가 일부분의 경제적 효과를 봤던 거고 저희도 하면서 많은 정치학자분들과 토의를 했지만 서로 미스언더스탠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틀에서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이제 10분여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전에 질문, 국경선을 그냥 털어서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닫아 놓고 이걸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혹시……

○ **발제자 박용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목진휴** 실장님 하시겠어요?

○ **발제자 박용주** 독일도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통일될 그 당시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독일 장벽이 무너진 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동독 정부에서 여행허가를 내 주겠다는 말이 와전이 돼 가지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당시에 통일을 생각 안 했고요. 서독 정부는, 서독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금기시켰습니다. 독일에서 아인하이트(einheit)라는, ‘독일의 통일’이라는 말은 독일 정부에서 금기시켰습니다. 남북협력이라든지, 동서협력이라든지 이런 말을 썼지 ‘통일’이라는 말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서독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1 대 1 통합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정치적으로는 그게 무슨 통일이냐, 국민들이 왔다 갔다 못 하는 게 무슨 통일이냐 그런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동독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실행된다면 그게 무슨 통일이냐고 나와 버리면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사회 목진휴**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실 말씀……

○ **토론자 정형곤** 추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동서독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인구이동 문제는 정치적 관점하고 경제적 관점하고 상당히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독 경우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인구이동 문제를 보면요, 유럽이 화폐통합이 된 18개 국가에 있어서 인구이동을 보게 되면요 주로 인구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좋은 일자리, 아니면 높은 임금, 이것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서독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물론 이런 요인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막기 위해서 1 대 1이라는 화폐통합을 했고요. 그 결과 물론 인구이동이 자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 하면 교육, 그러니까 젊은 나이층일 경우에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주어져도 가는 겁니다. 일단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어릴수록 좋은 교육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잡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그 당시에 판단돼야 될 문제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막는 것이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사회 목진휴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통일비용이 1경 뭐뭐 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자료에 보면 통일편익이 1경 얼마고요. 비용은 사천 몇백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그것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황부기 차관께서 장관 인사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통일 준비를 함께 해 나가고자 지난 8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래 놓고는 “오늘 잘하기 바랍니다.” 하고 싹 끝냈거든요. 되게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 중간의 말을 빼 먹었어요. 중간에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통일 준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센 말로 해서 “국회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관께서 정무적 판단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10분 딱 남았는데요. 국회 계시는 분들이 뭐하느냐 해서 국회에 계신 두 분께 ‘국회도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분씩 시간드릴게요.

이것은 먼저 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렇지요? 형님 먼저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 토론자 홍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통일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점을 저는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각 당에서 나름대로 통일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김무성 대표 주도하에 ‘통일경제교실’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 가지고 매주,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농업현황이라든가 의료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경제교실의 간사를 제가 맡고 있어서 또 누구보다도 오늘 토론회까지 나오게 돼서 큰 감회를 느끼는데요.

아까 토론 때 나왔던 북한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지금도 이혼소송이라든가 이산가족 사이의 친족혈연 관계를 정리하는 법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대두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국회가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앞으로, 사실은 저는 우리가 경제적인 편익이 적으면 그러면 통일을 안 해도 될 거냐? 저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여러 가지 법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국회가 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법률적인 준비, 통일 이후의 법제에 대한 준비는 국회를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제에는 우리 사회의 공통분모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든가 또 바람직한 장래의 미래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국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최 의원님.

새누리당 자랑했어요.

○ **토론자 최재천** 잘하시니까……

외국 학계에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논문을 쓰는 저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논

문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야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정확히 반대하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반대,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 계속 편성해 드립니다만 국회 예산분석하면 가장 불용액 많은 게 남북협력기금이잖아요. 국회는 쓰라고 행정부에 매년 1조 5000억씩 드려요. 그런데 안 쓰고 되돌아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되돌아 와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년 예산에도 이를테면 나진-하산, 나진항 관련해서 러시아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하나로 러시아 지원 70% 중의 우리가 일부를 인수하는 그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 야당은 일체의 이익 없이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지금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진-하산에서 어떻게 북한-한국-러시아 간의 삼각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행정부가 갖는 재량이자 의무가 될 겁니다. 예산이 갖는 법적 성격을 비교해 볼 때.....

덧붙여서 강조를 드리자면 최근아 러시아 개발본부장관이 북한 갔잖아요. 그래서 “북한 철도 전체를 우리가 현대화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총 3500km인데요. 비용은 250억 불 듭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돈 한 톨도 안 들입니다. 일단 선자재를 제공하고 나중에 광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정부 때 실험한 적 있잖아요. 채광장비를 주고 나중에 그걸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남북 거래에서 우리가 50만 불 남긴 장사가 있어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물론 햇빛정책도 새로운 버전으로 재변모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뭐라고 그럴까, 강압적인 방식의 프레스 정책도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께서 실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정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서평을 썼던 이응준 작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가디언지가 그것을 한번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북한 특수부대 출신, 우리가 북한은 특수부대가 많다 이랬잖아요. 북한은 사실은 군대도 많고 특수부대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통일되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그 소설에서 뭐가 된 줄 아세요? 전부 다 조폭이 됩니다, 조폭. 자기들이 가진 능력을 한국에서 발휘할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지하세계로 흘러들

어가서 이룰테면 살인면허자들이 돼요. 그런데 그때 가디언지가 또 하나 묻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너네들 작가들은 통일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니?”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통일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빈곤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분석을 넘어서 문학적 상상력이건 정치적 상상력이건, 아까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섬 국가에서 대륙국가, 유라시아 끝 국가로서 제대로 된 대륙국가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정학적 운명을 뛰어넘는 과격 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상상력을 발현시켜 나가는 단계로서 이런 토론회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 목진휴 고맙습니다.

국 처장께서 개회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국회가 첫발을 디뎠습니다.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깊게 따져 보고요. 또 국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경제·사회·문화,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노력을 오늘 특히 두 분 의원님, 토론회 끝까지 앉아 있는 의원님을 본 적도 참 오랜 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던 두 분께서 협력적 관계,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고요.

아마 통일될 때까지 그냥 여기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을지 좀 합시다만, 그래서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 할 텐데요. 마무리는 시간적으로만 마무리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위해서 큰 박수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언론보도 모음

국회예산정책처 "韓통일 경제적 편익, 비용의 3.1배"

2014년 11월 24일 (월) 17:44:02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서울=연합뉴스) 남승표 기자 = 남북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많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1경 4천451조 원으로 비용인 4천657조 원의 3.1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가저를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통일한국의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원화로 환산한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천318조 원에서 2060년 4천320조 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북한지역은 연평균 9.0% 성장하고 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해 장기기준선 전망보다 성장률이 0.2~0.8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16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47년부터 성장에 따른 추가 조세수입이 발생해 기존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이 122.4%로 하락해 41.5% 포인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통일비용보다 경제적 이익 3배 높아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1.24 17:49:52 송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은 3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내년에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통일 후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657조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3.1배 많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한국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은 연평균(2016~2060)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해 장기 기준선 전망보다 성장률이 0.2~0.8%p 높아졌다.

다만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될 경우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원에서 2035년 116.2조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통일시점이 늦어질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커져 통일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 최소화를 위한 경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저작권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문명

데일리 메디팜

등록일

14-11-24 17:22

기사주소

http://dailymedipharma.com/news_view.jsp?ncd=20555

[행사]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토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

Copyright © 데일리 메디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

통일 비용 4657조 < 1경 4451조 통일 경제편의

2014년 11월 25일 (화)
종합 08면

특히 북한지역의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 또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가 재무 증가와 관련해서 "통일에 따른 재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 원에서 2035년 116조2000억 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재무상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통일비용은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GDP)는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9000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다.

통일비용은 연평균 232조 원 소요, 2056년 357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340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 GDP대비 비중은 4.2%(2016년)에서 4.8%(2035년)로 늘어났다가 2060년에 2.8%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용의 부담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돼 주목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인 이익은 1경4451조 원으로, 예상 통일 비용(4657조 원)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60년 통일한국의 전체 경제규모

국회 '2015년 통일' 전제 산출
향후 45년간 비용의 3배 이의
1인당 GDP 7만9000달러 전망

■ 내년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45년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국회의 통일 비용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4.2%에서 2.8%로 낮아지는 등 통일 비

통일이후 45년 경제효과 1경4451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통일 이후 45년 동안 총 465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는 1경4451조원으로 3.1배의 경제적 편익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평화통일을 가정한 뒤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 동안 465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3.1배 많은 1경4451조원으로 계산됐다.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 봐도 통일의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다.

특히 45년 동안 통일한국의 GDP는 연평균 2.7% 성장,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GDP 세계 9위(5.5조 달러), 1인당 GDP 세계 7위(7.9만 달러)로 훌쩍 뛰어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45년 동안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기준선전망 보다 성장률이 0.2~0.8%p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63.9%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이 2016년

55조5000억원에서 2035년 116조 2000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통일비용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은 122.4%로 하락해 41.5%p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통일정책토론회 격려사하는 정의화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에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토론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14.11.25
zji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4-11-25 15:54 송고]

정의화 "통일은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 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1.25 18:07:26 송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통일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2014.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주는 마스터 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에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뤄야 할 과제"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해서도 "독일의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정 의장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참석

조문식 기자 (cho@ajunews.com) | 등록 : 2014-11-25 06:22 | 수정 : 2014-11-25 06:22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뤄야 할 과제”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한 정 의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의장 "통일, 남북한 문제 해소 마스터키"

기사등록 일시 : [2014-11-25 18:52:49]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주는 마스터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뤄야 할 과제다.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 통일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의장 "한반도 통일은 마스터 키"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

기사입력 2014.11.25 19:08:01 | 최종수정 2014.11.25 19:08:01 | 김갑수 기자 | kksjpe@daum.net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통일은 주판을 켜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며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 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예산정책처장, 임성호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갑수 기자 (kksjpe@daum.net)
Copyright ©2014 디트뉴스24. All rights reserved.

참달기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2014년 11월 25일 (화) 21:50:11

김경학 기자 ☞ kkkh1956@hanmail.net



▲ @뉴스타운

정의화 국회의장은 11.25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뉴스일자: 2014년 11월 25일 21시 26분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가 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woman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대한뉴스신문(주) 기사프린트>

정의화 의장,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참석

[대한뉴스/박철성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출판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종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등록일 : 2014-11-25 21:00:13

 인쇄하기

CLOSE

정의화 의장, "통일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 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구영희 기자

입력 2014-11-25 18:45:56



▲ 25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격려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말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일은 주판을 뒀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할 과제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에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격려사에서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4-11-25 18:45:56 최종편집: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박훈규 ddtvddt@hanmail.net

[신문고 뉴스] 박훈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 ©박훈규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훈규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 2014-11-25 18:01:35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타임뉴스 서울 = 최웅수】 정의화 국회의장은 11.25(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

뉴스일자: 2014년 11월 25일 17시 56분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koreaarttv.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청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국회=청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에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뒹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가 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4년 11월25일 [22:02:00]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최종욱 대표기자 cjo57@nanumnews.com

정의화 국회의장은 11.25(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나눔뉴스 편집국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4년 11월25일 [23:12:00]

한반도 통일 경제효과 1경4451조..통일가치가 비용보다 커

입력 : 2014-11-25 오후 5:15:3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남한과 북한이 통일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경4451조원, 비용은 4657조원으로 분석됐다. 경제효과가 비용의 3배 수준인데, 통일의 가치가 더 높은 셈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북한이 2015년도에 통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듬해인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45년간의 경제효과 1경4451조원, 비용은 4657조원으로 분석됐다.

또 통일 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7% 성장해 2060년 GDP는 5조5000억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의 1인당 GDP는 7만9000 달러로 세계 7위 수준

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지역은 개발효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관측인데, 북한지역의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라 남한의 GDP 역시 연평균 2.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에 통일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63.9%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통일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원에서 2035년 116조 2000억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이 생기면 116조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통일 비용은 최소화하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 경제적 효과>통일 비용

내년 통일하면 2015~2060년 통일 경제적 효과가 통일 비용보다 3.1배 많아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남북한이 내년에 통일을 이룰 경우 앞으로 45년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의 3배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예정처는 통일 후 2060년까지 발생할 비용은 4,657조원인데 비해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3.1배나 많은 1경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통일하면 2060년 경제규모(GDP)는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만 9,000 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한국의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정처는 북한지역의 GDP가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채무도 통일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원에서 2035년 116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려면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14-11-25 15:52:17

통일되면 45년간 1경4,451조원 이익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통일 전제로 손익 산출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만9000달러 예상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남북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3배 이상 더 많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국회의 통일 비용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가져올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1경4,451조 원으로 통일비용인 4,657조 원의 3.1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한국의 경제규모(GDP)는 2060년 5조5,000억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만9,000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원화로 환산한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북한지역은 연평균 9.0% 성장하고 그 파급 효과로 남한 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해 장기 기준선 전망보다 성장률이 0.2~0.8%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작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되면 2060년 국가 채무는 GDP대비 16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47년부터 성장에 따른 추가 조세수입이 발생해 기존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중이 122.4%로 하락해 41.5% 포인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14-11-25 14:10:08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참석

2014년 11월 26일 (수) 09:49:22

권정두 기자 swgwon14@hanmail.net



▲ 정의화 국회의장.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라며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뒤흔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를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했으며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 통일준비 아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통일은 주판알 튕겨 계산할 문제 아닌 무조건 이루어야

[2014-11-26 오후 12:31:46]

【수원인터넷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로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축사에서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차모기자(ggi5@daum.net)

☐ 홈 > 뉴스 > 정치/북한 > 국회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2014년 11월 26일 (수) 10:22:00

임화찬 기자 ✉ star@newsfinder.co.kr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국회의장은 11.25(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 뉴스파인더(<http://www.newsfinder.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의화 "통일, 남북한 모든 문제 마스터키"

- "경제적 딜레마 상황,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4-11-25 23:51:44 수정 2014-11-26 09:35:39



▲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서울=내외경제TV] 윤의일 기자 = 지난 25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에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정의화 의장이 참석했다.

정의화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며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뤄야 할 과제"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를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news0627@nbnnews.co.kr

윤익일 기자 news0627@nbnnews.co.kr

내외경제TV © All rights reserved

ISSUE & PEOPLE 연합신보

정의화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결할 마스터키"

조설 pv7982@naver.com

[국회=연합신보] 조설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1.25(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해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가 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4년 11월26일 [10:20:00]

정의화 의장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2014년 11월 26일 (수) 09:24:21

정영희 기자 ✉ luminous214@naver.com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의화 “통일은 남북한 모든 문제 해소할 마스터키”

“통일은 강요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2014년 11월 26일 (수) 09:09:05

원건민 기자 ✉ snapress@snakorea.com



▲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서울뉴스통신】 원건민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에 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중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 홍일표·최재천 의원,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밝혔다.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머니투데이

통일에 드는 비용은?

안정적 국가운영에 최대 4657조 통일편익 효과는 3배이상 많아

앞으로 남북관이 통일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학자들이 통칭하는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관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 안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대북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북한경제 재건 △남북제도 통합 등을 아우르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 혼란 및 이념적 갈등 △남북간 소득 격차 △남북주민간 이질감 등을 포괄하는 '비경제적 비용'으로 나뉜다.

기존 통일비용 연구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최소 1570억달러(약 173조6000억원)에서 최대 4657조원에 이르기까지 25배 이상의 편차를 보인다. 통일을 급진적으로 볼수록, 통일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통일비용이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통일 편익'이다. 통일편익은 △대북투자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경제 시너지효과 △북한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관광수입 증대 △교통망 복원 등 '경제적 비용'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스포츠강국 부상 △이산가족 문제해결 △사회·문화·관광서비스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등 '비경제적 비용'을 포괄한다. 이밖에 국방·외교비 등 분단유지비용 절감, 국

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외자유치 증대 등의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통일편익 추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적다. 2011년 통일부 용역과제에 따르면 목표 통일시점을 2030년으로 잡을 경우 유형의 편익은 140억8300만달러(2021~2030년)와 494억5600만달러(2031~2040년)에 달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45년 동안 발생할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의 3배 이상 될 것이라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예상 통일비용(4657조원)의 3.1배에 달한다.

통일비용은 연평균 232조원인데 2056년 357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340조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GDP 대비 비율은 4.2%(2016년)에서 4.8%(2035년)로 상승했다가 2.8%(2060년)로 낮아지는 등 통일비용의 부담이 당초 우려한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통일비용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시영 기자 apple@

2000년대 이후 통일비용 관련 연구

연구자, 기관(발표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골드만삭스(2000)	2000~2010	8300억~2조5400억달러
	2005~2015	1조700억~3조5500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2005)	2015	546조원(최저생계비·산업화 지원)
신창민(2007)	2015~2030	8577억~1조3227억달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8)	2011	통일 후 10년간 매년 남한 GDP의 7~12%
현대경제연구원(2010)	2010	1인당 3000달러:1570억달러(10년간 소요)
	2010	1인당 7000달러:4710억달러(15년간 소요)
	2010	1인당 1만달러:7065억달러(18년간 소요)
	2020	379조2000억~1261조1000억원
통일부(2011)	2030	813조~2836조원
	2040	1000조4000억~3277조6000억원

정의화 국회의장, 한반도 통일 반드시 이뤄야

[2014-11-27 오후 9:28:45]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 할 과제로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축하에서 "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통일준비야말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 최고의 과제"라고 말했다.

통일비용 천차만별, 오히려 거부감만?

· 관련 세미나 봇물, 비용은 최고 33배 편익은 최고 70배나 차이

“준비는 해야겠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사실 어렵죠.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천차만별이니.”

11월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일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분석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부의 대북전략이 모호한 상태에서 대북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간다.

연말을 앞두고 통일 관련 세미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월 25일에는 두 건의 굵직한 통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예산처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민족화해협력 국면협의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28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독일 통일과 그 이후: 독일 통일의 결과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세미나를 열었고, 앞서 19일에는 금융연구원과 정책금융공사, KDB 금융그룹 주최로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가 열렸다. 5일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 25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가정이 다르다 보니 춤추는 전망치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주요 공공기관들은 통일에 대한 전략을 본격 마련해 왔다. 연말에 잇달아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는 그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각 기관들은 재정, 금융, 건설, 외교적 측면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기관마다 가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보니 예측치와 추정치도 춤을 추고 있다. 당장 통일이 언제 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남북한의 경제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복지지출을 얼마나 볼 것인가, 통일 외적 효과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통일비용과 편익은 달라진다. 경제분석 시 어떤 분석모형을 따랐느냐도 큰 차이를 낳는다.

통일비용은 적게는 150조원에서 많게는 5000조원 가까이 추산된다. 33배 차이다. 통일의 편익은 차이가 더 크다. 적게는 200조원, 많게는 1경4000조원으로 추산된다. 70배 차이다. 남북통일이 될 경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얻게 될 이익도 전망이 다르다. "남북통일 시 중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강문성 고려대 교수)이라는 의견과 "일본의 이익이 가장 크고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만큼 남북통일 이후의 경제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는 결정적 원인은 통일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식기 시작한 남북 교류는 박근혜 정부가 돼서도 좀처럼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직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산됐다.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응원단 방문이 무산됐고,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전격 방문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지만 국내 탈북단체의 빼라건이 터지면서 남북 분위기는 곧 경색됐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북측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화해 기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11월 23일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통과와 관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 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며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또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어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독일		비교	한반도		비교
	서독	동독		한국	북한	
인구	6260만명	1640만명	3.8배	4877만명	2403만명	2.0배
경제성장률	3.8%	1.9%	2.0배	3.6%	0.8%	4.5배
명목GDP	1317억달러	135억달러	9.7배	1428억달러	33억달러	42.5배
1인당GDP	21300달러	8200달러	2.6배	2만6000달러	1300달러	20.0배
정부지출	GDP의 45~50% 수준			GDP의 30% 수준		
총세수	GDP의 35% 수준			GDP의 25% 수준		
대 동독 및 북한 지원규모	연평균 2조원(1971~1989년)			약 141억원(2012년)		

(자료: 금융위원회)

통일 비용 및 편익

국회예산정책처(2014)	통일비용 : 2016~2060년까지 연평균 232조원 필요. 총 통일비용 1경428조원 통일 편익 :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3.3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 2.7%) 연평균 북한 GDP 9.0% 증가, 남한 GDP 2.1% 증가
현대경제연구원(2014)	2050년 남북 단일경제권 형성시 실질 GDP 5663조원, 1인당 실질 GDP 7만달러 2050년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시 실질 GDP 7358조원, 1인당 실질 GDP 9만2000달러
아세아문제연구(2014)	통일비용(2015~2035년 20년간) 923조~1627조원 통일 편익(2015~2050년, 35년간) 4900조원, 연평균 성장률 남한 3.2%, 북한 6.2%
금융위원회(2014)	북한 개발재원 20년간 5000억달러
통일연구원(2013)	2030년 통일 시점, 통일비용 523조원(명목, 20년간), 통일 편익 1경원(명목)
통일부(2013)	2030년 통일 시점, 생산유발효과 46조~57조원, 취업유발효과 500조~1200조원
문정인(2012)	통일비용 : 1조3209억 달러(선택형 통일, 25년간 지출)~5조8억 달러 (무력형 통일, 53년간)
한국개발연구원(2010)	통일비용 3220억달러(점진적, 30년간)~2조1400억달러(북한 붕괴시)
현대경제연구원(2010)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 위해 향후 10년 소요 통일비용 1570억달러, 통일 편익 2200억달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각 기관)

남북관계 경색 상황서 전망은 무의미

전문가들은 5·24 조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당면한 현안 어느 것도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일비용과 전망은 경제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남북 상황이 조금만 변화해도 대부분 폐기할 수밖에 없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신재윤 위원장은 11월 19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개발에 550조원이 들고, 증세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추정치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국내 학계·정책 금융기관, 금융권의 보다 생산적인 통일 논의를 조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단 것은 이 때문이다.

충추는 통일비용과 편익 분석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비용산출이 안 된 채 ‘몇천조원’ 등의 보도가 나가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만 부각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졌다. 특히 사실상 통일세대가 될 20대는 ‘필요없다’가 31.6%에 달했다.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걱정”이라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73%나 됐는데, 통일의 손익을 따졌을 때 우리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경제정책 등을 담당하는 ‘거시경제전략과’를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통일 시 필요한 재정적 충격과 방비책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서조차 현 상태에서는 통일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힘들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한 관계자는 “통일비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6년께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시나리오들이 많고, 당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대한 전략도 상당 부분 수립해 놓았다”며 “최근 논의되는 내용들은 당시 검토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통일비용과 편익 등은 정치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못한다”며 “현 시점에서의 남북한 상황을 기준으로 통일효과를 추산하고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재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병을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통일정책토론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결과보고서

인쇄일 2014년 12월 23일
발행일 2014년 12월 26일
발행인 국경복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 2070-311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ISBN 978-89-6073-796-9 9335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
(Tel 02-788-46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회예산정책처, 2014

